

95.9.26

“정책 대전환 없이 식량자급 불가능”

세계 식량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이 20%대로 떨어져 국제수지, 식량안보, 국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소비량은 1천9백74만 4천톤인데 반해 국내생산량은 5백46만5천톤에 불과, 곡물자급률이 27.7%를 기록했다. 93년의 33.8%에 비해 한해 사이에 무려 6.1%나 떨어진 것이다.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9%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도 52.8%에 불과, 93년(61.3%)보다 8.5%나 떨어졌다. 올해의 곡물자급률도 28.5%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곡물별 자급률은 주식인 쌀이 93년의 96.8%에서 지난해에는 87.8%로 떨어졌고, 보리쌀도 74.9%에서 48.3%로 크게 떨어졌다. 옥수수는 사료용 수입이 늘어나 1.4%에서 0.9%로 떨어졌다. 이 밖에도 콩은 13.8%에서 12.6%로, 감자류는 99.6%에서 93.6%로, 팥·녹두 등 기타곡물은 12.9%에서 11.0%로 각각 떨어졌다. 그러나 밀은 수입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우리밀살리기운동에 힘입어 생산량이 1천톤에서 2천톤으로 2배나 증가했다.

곡물자급률 28% 식량자급률 52%

이처럼 곡물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1인당 쌀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등 식량용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육류 소비 급증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의 확대로 곡물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는 분석했다. 사료용 소비량은 92년 8백1만9천톤에서 94년 9백40만톤으로 17%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1천만7천톤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학계와 농민들의 해석은 다르다. 사료용 소비량 증가보다는 정부의 개방정책과 저농산물가격정책이 자급률 하락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70년대 정부의 장기자원대책 마련에 참가했던 한 학자는 “농수산부 수입담당자와 소맥협회의 결탁으로 정부의 밀자급률 40% 제고방안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밀자급률 제고 기회를 놓쳤다”

고 주장했다. 그 바람에 75년 5.4%에 달했던 밀자급률이 90년에는 0.01%로까지 떨어졌다가 우리밀살리기운동으로 약간의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8%의 밀자급률에서 16%로 자급률이 배로 높아졌다. 재벌위주의 농산물가격정책과 복합영농 실패, 대미수출 유지를 위한 농민 희생 강요 등 정부정책 탓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농업이 담당하는 환경보존기능 등 공익기능(농촌진흥청 추계 약93조원)을 무시 ▲통일 대비 중장기적 식량정책 부재 ▲더 많은 수입위한 ‘정치적 교감’ 의혹 등의 빛나간 정책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곡물자급률이 낮아짐에 따라 농가경제 파탄과 농심 이반 외에도 국제수지 악화, 식량안보와 국민건강 위협 등 국민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일고 있다. 지난해 곡류 등 농산물 무역적자액은 무려 36억5천7백60만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63

억. 그동안 정부는 부족분을 80년대 초과도입한 재고분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이 재고도 바닥나 올해 비상비축분(5백90만석)을 제외하면 거의 여유분이 없다. 따라서 기상이변 등으로 내년도 작황이 안좋을 경우 쌀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80년대 초 농수산부는 부족분 90만톤의 도입을 건의했으나 청와대의 지시로 무려 1천5백만톤

물이 거의 무사통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허용기준의 차이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쌀 잔류농약기준 국내의 50배나 되기도

한국농촌사회연구소의 권영근소장은 미국에서 쌀이 건강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소시장 접근물량의 3배 이상이 추가도입돼야 할 실정인데다 노령인구의 자연퇴출, 고소득 농축산물로의 작목전환, 경지면적 급감 등의 구조적인 감소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기업농·전업농을 통한 농업의 기계화와 대규모화, 쌀값의 계절적 진폭 허용을 통한 가격지지, 미국종합처리장 건설 등을 통해 쌀생산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감산경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학계와 농민들의 입장이다. 농업의 파탄 자체가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농정의 일대 전환 없이는 농업의 회생과 식량자급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장원석 교수는 “WTO에서 허용하는 17가지 지원금 및 보조금 지급 등 WTO 비껴가기, 기업농이 아닌 협동화영농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추구, 상향식 농정의 정착,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산·학·연·관 합동으로 기술·경영기법 개발 등

곡물자급률 28% 불과... 재고도 바닥 “생산비 보장·보조금 지급해 여건조성해야”

억3천만 달러의 57.7%에 달했다. 올해도 6월말 현재 농산물 무역적자액이 23억3백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8%나 증가했다. 그중 70% 이상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생긴 것이다.

지난해 무역적자의 58%가 농산물 무역적자

하반기에는 세계 곡물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와 밀 옥수수 등의 가격상승이 예상돼 수입금액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은 약간만 남아돌아도 값이 폭락하고 약간만 모자라도 값이 폭락하는 이른바 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 적자폭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지 악화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주식인 쌀은 92년 자급률이 97.5%로 떨어진 이후 하락세를 거듭, 지난해에는 87.8%까지 떨어

이나 도입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선진국의 감산정책 등으로 인한 곡물공급 감소,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곡물수요 급증, ▲중국 이 주요 곡물수출국에서 거대한 수입국으로 전환 등으로 세계곡물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더구나 2천년대 초반에 세계식량위기가 올 전망이어서 식량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운송과정 등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수의 수입농산물에 방사선이 나 과다한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얼마전 미국의 어느 굴사과 수출업자가 굴과 사과를 농약에 담그는 장면이 폭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쌀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덱스 기준상의 일부 잔류농약 허용치가 국내기준의 최고 50배에 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미국농산

식품으로 인식돼 소비량이 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입농산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볼 때 국민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식량수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해 재고량을 늘려야 하며, 기업농 중심의 영농정책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영농’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외적 요인인 없는 한 쌀은 향후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어도 주식인 쌀과 보리(주식분)에 대해서는 자급자족을, 기타 곡물은 현수준서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소시장 접근에 따라 도입되는 쌀은 전액 가공용으로 사용해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농민들은 정부의 약속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도 자급률이 최소한 4%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 최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농민들의 자기계발 노력과 결합돼야 농회회생과 식량자급 달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박정민 정책부장은 “기업농은 1인당 쌀생산비를 줄이는 데는 유효하지만 단위당 생산량은 줄여줄 수 밖에 없어 ‘작량자급률’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며 ▲적정 수곡가와 수매량 통한 가격보장 ▲차선택으로 휴경지원 등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통한 생산여건 조성 ▲농법개혁 통한 단위당 생산량 증대 ▲절대농지 완화정책 철폐 등이 이뤄져야만 농민도 살고 식량안보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부장은 또한 “유럽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17가지 정부의 지원·보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무성의한 농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영인 기자〉